

원전 입지와 지역 개발

노 윤 래

한국원전연료(주) 부사장

지 난해 우리 나라 원자력계의 어두웠던 단면을 되돌아 보면서 丁丑年의 새해를 맞아 금년에는 우리의 원자력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작년 국내 원자력계의 아픔을 두 가지 든다면, 영광 5·6호기 건축 허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역과의 갈등과 이로 인한 원전 개발의 지연을 첫째로 꼽을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원자력 사업의 주관 부서를 과학기술처 중심의 기술 개발에서 통상산업부 주도하의 에너지 개발 위주로 전환시킨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파생된 사업 부서간의 이견이 원활한 사업 수행의 장애물이 된 점이다.

돌이켜 보면 국내의 원자력 기술이 미천하였던 80년 중반에는 당연히 원전 사업의 목표를 기술 자립에 두고 한국 표준형 원전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이제는 기술 자립이 만족할만한 상태에 도달되었으므로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성 위주의 사업 관리 체제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이 원자력계의 중론인 만큼 사업 이관에 따른 아픔은 곧 치유될 것이다.

문제는 원전 사업을 위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과의 갈등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광 5·6호기가 이미 확보된 부지에 계속해서 원전

을 건설하는 경우인데도 주민의 반대가 심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신규 부지 선정시의 주민 저항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겠다. 원전이나 폐기물 처분장 입지 과정에서 겪은 쓴 경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에너지 형편상 원전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주민의 납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에너지 정책은 무엇보다도 '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원전과 지역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지역 정책이 접목을 이룰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전 개발은 과거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경제성 있는 질적 에너지 공급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원전 입지는 주민의 소득 증가, 취업 기회 및 지방 재정 확대, 교육·복지 등 생활 환경의 정비, 생활권의 광역화, 지역 사회의 도시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의식 개혁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세계 유류 파동의 여파로 추진된 탈유(脫油) 전원 개발 계획에 따라 원전 개발을 급속히 확대한 결과, 현재 11기가 운전중에 있으며 원전의 비율도 전체 전력의 40%에 육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80년초 전개된 국내 정치·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원전의 부정적 시각이 널리 퍼지고, 미국의 TMI와 옛 소련의 체르노빌 사

국내 에너지 형편상 원전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주민의 납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에너지 정책은 무엇보다도
 ‘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원전과 지역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지역 정책이 접목을 이룰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전 개발은 과거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경제성 있는
 질적 에너지 공급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원전 입지는 주민의 소득 증가,
 취업 기회 및 지방 재정의 확대, 교육·복지 등 생활 환경의 정비, 생활권의 광역화,
 지역 사회의 도시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의식 개혁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고, 국내 원전 주변의 고무 장갑과 방사능 유출 등에 대한 언론의 과장 보도, 온배수에 의한 양식 어장 피해 보상 요구, 원전 후보지에 대한 개발 제한과 이로 인한 땅값 하락 등이 원전의 입지 선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원전 입지 선정이 매우 어렵게 되자 정부는 전력 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반응을 얻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을 입법화하고 80년말부터 매년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 사업, 소득 증대 사업, 육영 사업에 쓰이는 지원 금액은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법은 원전 입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발의되었으나 법제화 과정에서 모든 전원으로 확대되어 안전을 포함한 원전의 특수한 문제 대응에 실패하였다.

둘째, 원전 소재 군(郡)은 지원법에 의해 받는 수혜액 만큼 상급 관청인 도(道)로부터 재정 지원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으로, 군의 입장에서 보면 원전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마땅히 시

정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 정부는 지원금의 대부분을 공공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공공 사업은 지방 정부 본연의 임무이므로 지원금은 가급적 주민의 소득 증대와 육영 사업에 치중되어야 한다. 이는 주민의 소망이기도 하다.

넷째, 원전 사업자와 지역의 유대를 강화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을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압력과 업무량의 폭주가 예상되지만 지원금을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지역 개발과 원전 PA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수혜 기간이 발전소 전수명 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 발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고 주민의 호응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초기에는 보다 많은 지원금을 할당하고 점차 줄여 나가는 점진적 지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지역 문제는 어민과의 갈등인데, 매년 되풀이 되는 피해 보상 방식을 탈피하고 보상 구역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역 개발이 될 것이며, 이같은 분위기가 고조될 때 지역 주민에 의한 자발적 원전 유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